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작 성 · 문 의	2016. 7. 18(월) 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과장 박용우, 서기관 이유진 (Tel. 044-200-2123~4)
			6·25전쟁 남북 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 과장 추석용, 사무관 양인모 (Tel. 02-2020-2510, 2516)
* 엠바고 : 7.18(월) 11:00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통일부			

## 6.25전쟁 남북신고 5,505건 심의 완료, 4,782명 남북자 결정

- 황교안 총리 주재, 제22차 '6·25전쟁 남북 진상규명위원회' 개최

□ 정부는 7월 18일(월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「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」를 열고, 142명을 6.25전쟁 남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.

\* (참석) ▲정부위원(통일부·행자부 장관, 경찰청장, 외교부2차관, 국방부차관),  
▲민간위원(김석우, 이미일, 제성호, 이경찬, 김태훈, 김광수, 하영남, 도경욱)

○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작년 12월까지 신고된 남북사건 5,505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, 모두 4,782명을 6·25전쟁 남북자로 공식 결정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·도 실무위원회(위원장 : 시·도지사)의 사실 조사와 소위원회(위원장 : 통일부 차관) 심의를 거친 195명을 심사하여, 이 중 142명을 '남북자 결정'으로, 10명은 '남북자 비결정'으로, 43명을 '남북확인 판단불능'으로 결정했다.

- **황교안 총리**는 납북자 문제는 분단의 가장 큰 아픔중 하나로서, 정부는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,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,
  - 이를 위해 앞으로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보고서 편찬과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- ※ (붙임) 1. 제22차 전체회의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
- 2. 납북자 결정 142건 기본 통계자료(제22차 전체회의)
- 3. 납북자 결정 4,782건 기본 통계자료('16.7월 기준))
- 4. 6·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요

【붙임 1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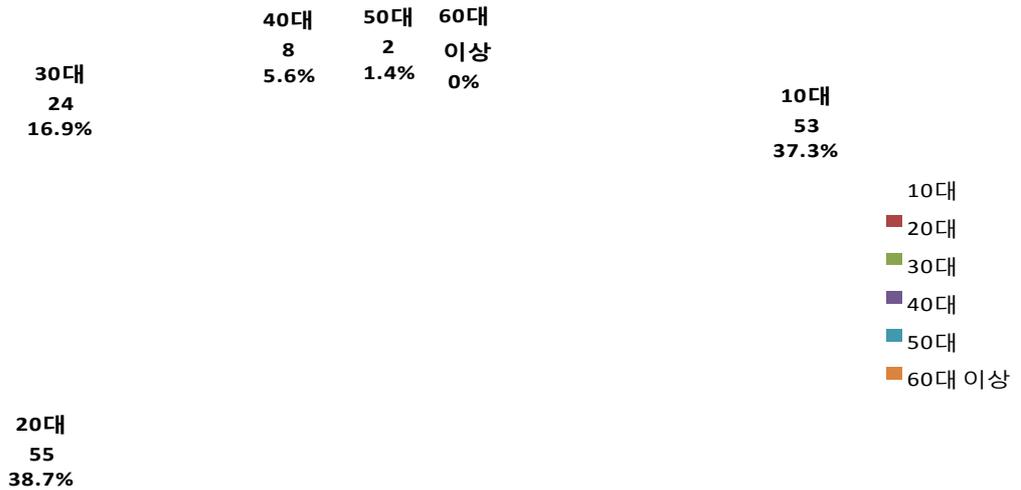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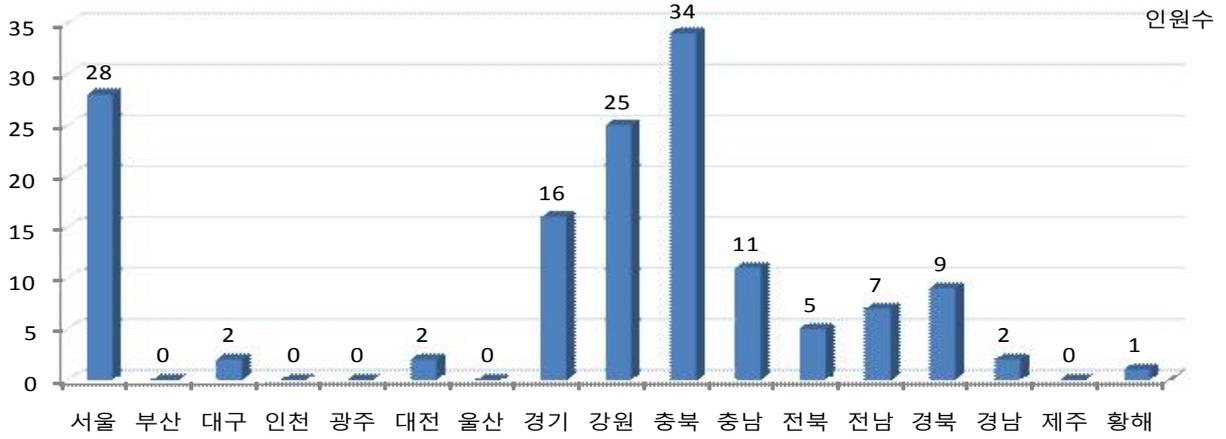
## 제22차 전체회의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

납북자	내 용
이상기 (부통령 비서실장)	이상기(李相麒)는 1904. 6. 2일 생으로 납북 당시 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, 자녀들만 피신시킨 후 처와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다가 1950년 7월경 북한군에 의해 납치
김을윤 (국방부 산하 한국문화연구소 부소장)	김을윤(金乙允)은 1920.11.26일 생으로 국방부 산하 한국문화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, 1950년 7~8월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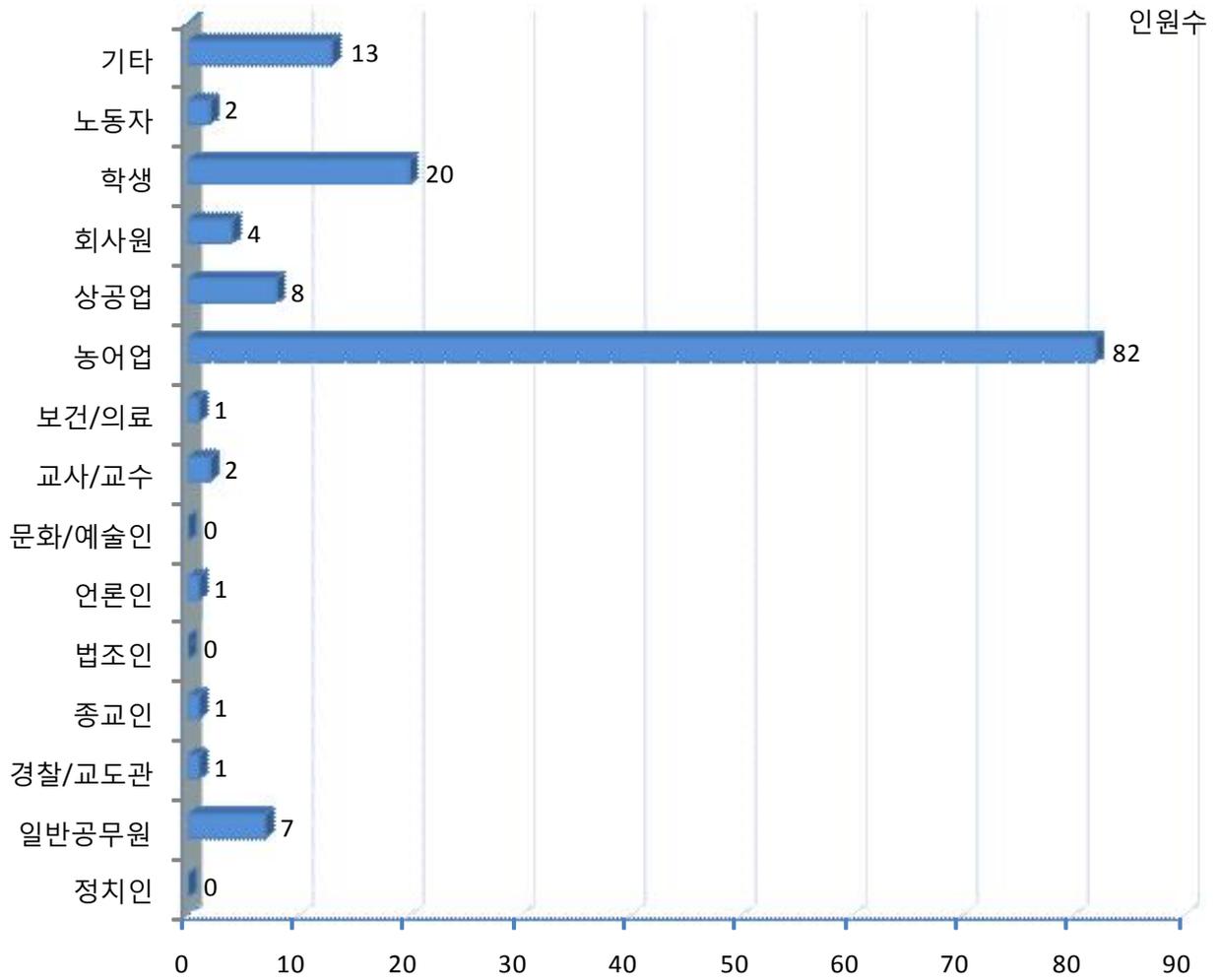
【붙임 2】

**남북자 결정 142건 기본 통계자료** (제22차 전체회의)

□ 거주지별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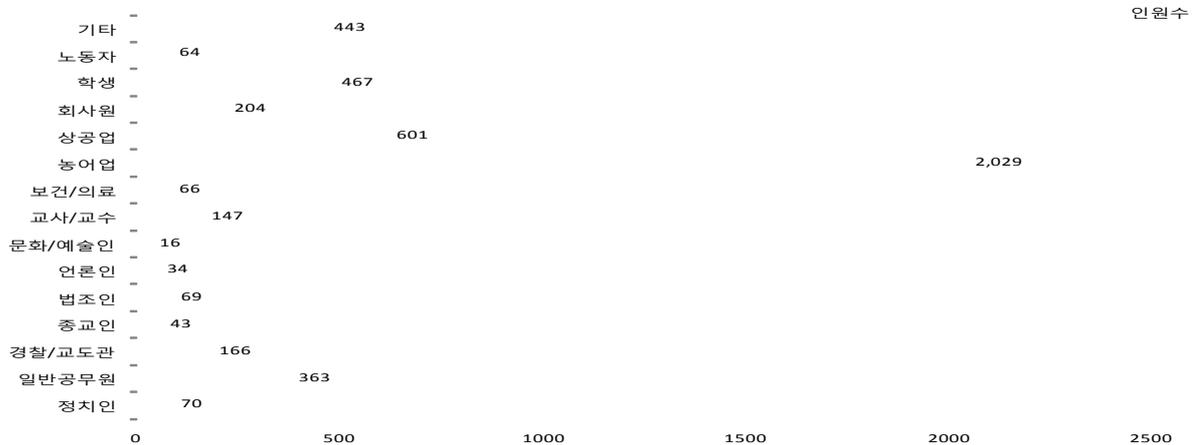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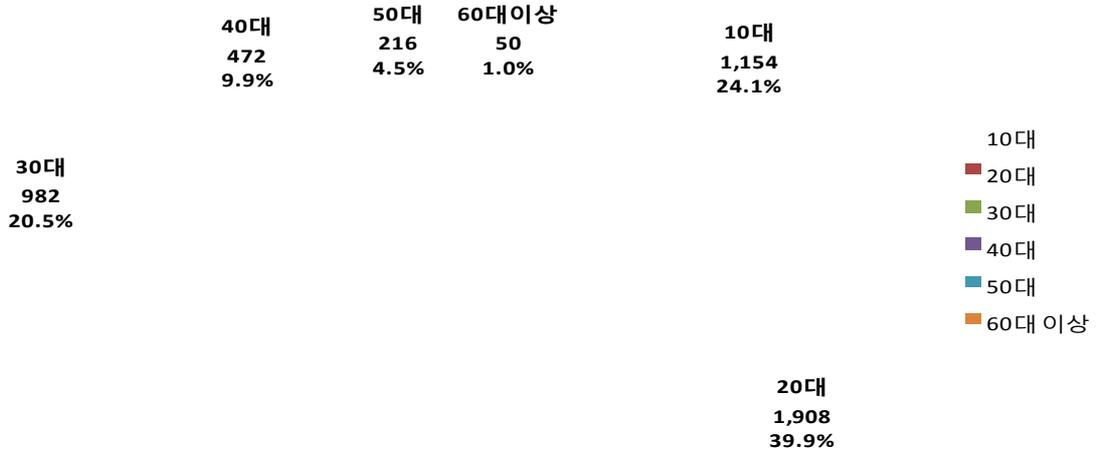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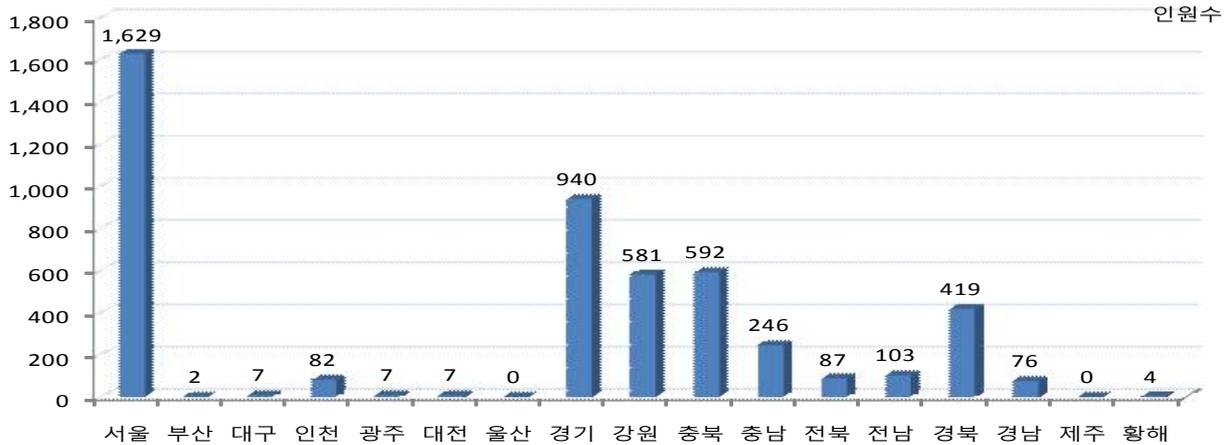
## □ 직업별 현황



【붙임 3】

# 납북자 결정 4,782건 기본 통계자료('16.7월 기준)

## □ 거주지별 현황



## 6·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요

### 1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

○ 설치 목적

- 6·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규명,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

○ 설치 근거

-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제4조 3항(‘10. 3. 26. 제정, 9. 27. 시행), 동법률 시행령 제2조

### 2 위원회 주요 기능

○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

- ① 6·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
-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
-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·결정
-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-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
-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,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
- ⑦ 기념사업,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

### 3 위원회 구성

- 국무총리(위원장), 정부위원(통일부장관, 외교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자치부장관, 경찰청장), 민간위원(9명)

### 4 사무국 구성

- 1국 2과(기획총괄과, 조사과) 31명으로 구성 (공무원 13명, 상근계약직 18명)

### 5 운영 현황

- ‘10.12.13. 구성 이후 총 22회 개최(연 3~5회, 대면 8회, 서면 14회)
- 위원회 상정 5,381명(납북자 결정 4,782, 비결정 138, 판단불능 461)